서 평

小林良彰, 『現代日本の政治過程: 日本型民主主義の計量分析』,東京大學出版會, 1997年

이숙종

세종연구소

현재 게이오대 법학부의 교수로 있는 고바야시 요시아키(小林良彰)는 계량분석을 통하 여 주요 정치학적 가설을 검증할 수 있는 많지 않은 일본 정치학자의 하나이다. 1997년 1월 동경대학 출판회에서 출판된 그의 저서 『現代日本の政治過程: 日本型民主主義の計量 分析』은 그 동안 공공선택, 투표행동 및 선거, 정치과정 등에 관한 자신의 연구를 대의 제 민주주의의 기본 틀로 종합적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책의 본문은 크게 3부분으로 나 누어 지는데, 첫째 부분은 유권자가 자신의 정치적 희망을 대표할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선출된 의원은 자신이 제시했던 공약을 국정에 반영한다는 대의 민주주의가 일본에서 작동하지 않음을 분석한 가장 돋보이는 부분이다. 둘째 부분은 정치가와 유권자라는 2가 지 행위자로 분석단위를 옮겨 정치가의 합리성 가설과 유권자의 투표행동 가설을 검증 하고 있다. 이 부분은 정치가의 행위 분석의 경우 제시된 정치가의 합리성 가설들을 모 두 수용하고 있어 가설들간의 중요도 차이가 검증되고 있지 않고, 유권자의 행위 분석의 경우는 기존의 투표행동에 관한 통상적인 분석틀을 유지하고 있어 분석의 신선함이 떨 어지는 아쉬움을 남긴다. 마지막 부분은 민주주의의 재생을 위한 선거제도를 비롯한 정 치의 제도적 개선책을 제시하고 있다. 매 장이 하나의 독립적 논평이 가능한 방대한 분 석을 시도하고 있어 전체의 요약ㆍ정리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일부 주변적인 장들은 대 폭 생략하기로 한다. 또한 방법론보다는 분석 결과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책의 내용을 정리하기로 한다.

제1부 「문제의식」은 현대 일본의 정치과정에 관한 종래의 연구를, 정당·관료, 유권자, 정치제도 3가지 분야로 나누어 검토하고 있다. 고바야시는 이들 분야의 연구들이 처음에는 주관적 생각에서 일본정치를 논하거나 특정의 사례연구에서 전체상을 그리곤 하였으나, 이후에는 데이터를 이용한 실증적 연구가 축적되어 분석의 수준이 향상되었다고 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들이 개별적 연구영역에 제한되어 정치과정에 있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어떻게 상호관련되는지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고 문제점을 지적한다. 그는 자신의 연구를 현대 일본의 정치과정을 되도록 포괄적으로 다루는 계량분석으로 스스로 자리매감하고 있다. 그의 분석의 포괄성은 유권자-정당・정치가-정책으로 이어지는 정책과정의 흐름에 대한 민주성 검증으로 본문에서 시도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본문의 첫 부분이자 제2부인 「민주주의의 기능不全」은 정당공약과 정부지출의 관계

를 살펴보는 3장과 공약과 투표행동의 관계를 살펴보는 4장으로 나뉘어져 있다. 3장의 목적은 정당이나 정치가가 유권자에게 제시하는 공약이 어떤 유형으로 나타나는지, 또한 정당들이 제시했던 공약은 정부 정책에 과연 반영되는지를 수리모델로 검증해 보는 것 이다. 공약에 대하여 고바야시가 이용하는 데이터는 1947년부터 1990년까지 각 정당의 공식문서 및 자료를 이용하여 사회복지, 보건위생, 생활보호, 교육·노동, 방위, 외교·무 역, 농림수산, 상공광업, 운수·통신, 지방자치, 주택·중소기업, 국토환경, 일반행정, 사 법·경찰, 國債, 기타 등의 16개 항목별로 내용분석을 하는 것이다. 정부지출에 관한 데 이터는 일반회계 지출과 재정투융자 지출을 모두 이용하고 있다.

먼저 일본 정당들의 공약 변화를 매 5년마다 보면 시기에 따라 빈번하게 이동하고 있 어, 특정 정당의 정책노선이 일관되지 않고 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해 정책을 제시하는 경 향이 있음을 발견하고 있다. 민사당과 공산당은 공약 변화가 비교적 적은 편이나, 다른 정당들은 정책 변화가 잦은 것으로 나타난다. 자민당의 경우 1955년 체제가 시작될 때는 社·共 양당보다 생활관련 예산에는 소극적, 사회관련 예산에는 적극적 정책으로 시작하 였다. 그러나 1970년이 되면 생활 및 사회관련 예산 증액에 보다 적극적으로 입장으로 전환하면서 자민당 대 사회당이란 구도를 형성하게 된다. 1980년이 되면 자민당과 민사 당은 생활관련 예산에 소극적으로 되면서 가까워지고, 사회당과 공산당은 현상유지적 입 장으로 비슷해져 자민ㆍ민사, 사회ㆍ공산, 공명당의 3극구조가 형성된다. 그러나 이후 공 명당이 혁신정당으로서의 색채가 약화되면서 여타 야당들과 유사한 공약을 하여 1985년 에는 자민당과 야당이란 구도를 형성하게 된다. 이어 1990년이 되면 자민당이 민사당과 유사해지면서 생활관련 예산에 대한 주장에는 정당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사회당은 60년대 전반까지 생활관련 예산의 증액과 사회관련 예산의 감액내지는 현상유지를 주장하다가, 1970년이 되면 전자의 현상유지로 일시 방향전환을 꾀한다. 그 러나 1975-85년에는 다시 생활관련 예산에 대한 증액 입장으로 이동하며, 사회관련 예산 에 대해서는 80년대 이후 증액을 요구하였다.

여기에서 공약 변화란 고바야시가 구분한 항목들에 관련된 예산을 증액하느냐, 아니면 현상유지나 오히려 감액을 주장하느냐는 양적 차이의 변화이기 때문에 정당들의 정책변화를 예산안 시책 변화 만으로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남는다. 고바야시가다음 분석에서 밝히듯이 정당공약이 예산결정에 반영되는 정도가 낮아 정당들이 예산결정에 아예 적극적이지 않는다면 특정 정당의 예산시책이 그 정당의 정책을 전적으로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예산결정 이외에도 국회에서 제반 법령 통과시의 의원별 또는 정당별 표분석과 같은 다른 지표를 통하여 정책변화를 감지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정당공약이 정부지출에 얼마나 반영되는지에 관한 문제는 정당이 공약을 정부지출에 반영하게 한다는 '정당기능 모델', 관료가 수요를 고려하여 예산배분을 한다는 '관료수요 모델', 정부지출이 국민의 선호와는 상관없이 稅收에 영향을 미치는 경기변동요인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재정수정 모델' 3가지를 적용하여 분석해 보고 있다. 고바야시는 일본에서는 정당 공약이 예산결정에 반영되는 정도가 다른 나라에 비하여 낮으며, 특히 야당의 영향력은 매우 한정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정부지출 16가지 항목 가운데

정당공약이 영향을 미치는 항목은 4가지에 불과한데, 농림수산과 일반행정 관련 예산 2가지는 여당이 주도하는 것으로, 운수·통신 항목은 여야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건위생 항목은 여야가 보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방위나 외교·무역, 사법·경찰, 國債 분야는 여야 공약 모두 예산 변화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방위분야는 경기변동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 증액되는 방향으로, 외교·무역 분야는 정당을 통하지 않고 수요가 관료를 통하여 흡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장은 유권자가 후보자의 공약을 자신의 투표행동에 얼마나 반영하는지를 알아 보고 있다. 고바야시는 1986년, 1990년, 1993년 3차례의 중의원 선거에서 전 후보자들의 선거 공보를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한 다음, 공약과 선거결과 사이에 관련이 있는지를 검증하 고 있다. 그는 유권자들이 선거 당시 후보자가 제시하는 공약을 하나 하나 상세히 검토 하기 보다는 일련의 공약을 패키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선거 당시의 주요 공약들을 '변화-안정'의 축과 '보수-혁신'의 축으로 정비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1986년 선거에서는 자민당 비판, 간접세 반대, 정권교체 등의 공약이 변화 쪽이라면, 정국의 안 정이나 사회간접자본의 정비 등은 안정의 쪽에 서게 된다. 또한 방위력 정비가 보수라 면, 호헌, 방위력 억제 등은 혁신의 쪽에 서게 된다. 이를 후보자의 득표율과의 상관관계 를 보았을 때, 변화보다는 안정을, 혁신보다는 보수적인 공약을 제시하였던 후보자가 높 은 득표율을 얻은 것으로 나타난다. 1993년 선거 분석의 경우, 농산물수입 자유화 반대, 비군사 국제협력, 정국의 안정, 정권교체, 소득세 감세, 선거제도 개혁, 복지, 사회자본 정 비, 중소기업 대책, 지방분권 등이 쟁점화되었다. 이 경우 공약들의 내용분석 결과를 인 자분석해보면 '정치개혁'과 '정국안정-정권교체'라는 2가지 축이 중요하게 나타난다. 각 후보자의 공약위치와 득표율의 관계를 보면 정치개혁은 사실상 선거결과에 관련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안정-변화에 대해서는 자민당 후보자의 안정 호소가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 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후보자 공약의 패키지화된 인지는 사실은 소속정당을 매개로 한 것으로 후보자를 정당별로 나누어 보면 후보자 개인의 공약이 득표율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후보자의 소속 정당의 이미지가 투표결정에 주요 요인이 된다는 다른 분석들과 일치하는 점이다. 문제는 다른 연구들이 일본 유권자의 투표행동에 있어 후보자 개인 요인보다 영향력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왔던 정당 요인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임에 비하여, 고바야시는 소속 정당의 영향을 받는 후보자공약이 투표결정에 별로 영향력이 없다는 것을 부각시키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유권자가 후보자의 공약 패키지를 인지할 때 그의 소속정당 이미지에 의하여 크게 결정되더라도 정당 이미지에는 정당 공약이 내포되어 있을 것이며, 후보자 공약이 소속정당의 전반적인 공약과 크게 배치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후보자 개인의 공약과 소속정당의 공약을 어떻게 분리할 것인지의 문제가 남는다.

3장과 4장의 요지는 결국 정당이나 후보자의 공약이 정책에 반영되는 효과가 적으며, 공약이 선거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즉,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공약을 보고 투표하 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제시한 공약을 기초로 유권자가 선거에서 선택을 하고, 그 선택결과로 구성된 국회 논의로 정책이 형성된다는 대의제 민주주의 시 스템이 일본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게 된다. 고바야시는 이렇게 민주 주의의 기능不全이 일어나게 된 이유를 제5장 "선거에 있어서 공약의 기능不全"에서 다음 3가지로 해석하고 있다. 첫째는 선거 당시 유권자와 후보자 간에 관심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 둘째는 유권자가 후보자의 공약을 제대로 인지하지 않는다는 것, 셋째는 정치가가 자신의 공약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먼저 유권자와 후보자의 관심의 불일치문제를 보면, 유권자의 관심이 높은 문제들, 예를 들어 1986년 선거의 세금, 복지, 물가와같은 경제문제에는 정당간의 명확한 차이가 없는 반면에 방위나 농업 문제와 같은 유권자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은 문제가 오히려 정당간에 대립 쟁점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1990년 선거의 소비세 쟁점이나 농산물 수입자유화 같은 문제는 야당의 반대가 희석되면서 여당과의 차별화가 모호해져, 정치윤리의 경우는 자민당만 나쁜 것이 아니라 사회당도 마찬가지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투표행동의 결정요인이 되기 어려워졌다. 1993년 선거에서 부각되었던 정치개혁의 경우, 새로운 정치니 깨끗한 정치니 모호한 슬로건만 많았지 구체적인 대안제시가 없었던 관계로 투표결정 요인이 되기 어려웠다고 분석한다.

정당이나 후보자의 공약에 관한 유권자의 주관적 인지와 객관적 사실 간에 괴리가 있다는 사실도 1993년 선거 분석을 통하여 밝히고 있다. 예를 들어 농산물수입 자유화의경우, 자민당 후보자의 63.5%가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35.8%가 반대를, 0.7%만이찬성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유권자들은 자민당 후보자의 35.4%가 자유화에 찬성하였고, 32.4%가 반대하였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국제공헌의 쟁점도 자민당 후보자의 26.4%가비군사적 국제공헌을 주장하였고 군사적 공헌은 1.1%만이 주장하였는데도 유권자들은 자민당 후보자의 58.8%가 군사공헌을, 8.3%가비군사 공헌을 주장하였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괴리는 야당인 사회당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일본의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공약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치가의 언행 불일치도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공약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1993년 선거에서도 구체적인 선거제도에 대해 언급한 후보자가적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선된 후 정치가들은 선거제도를 병립제로 바꾸는 것이 정치개혁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농산물수입 자유화의 경우는 선거공약에서 반대하였던 후보자들이 당선 후에는 조건부 개방이나 수입 자유화로 상당수가 선회하였다.

제3부는 「정치가의 합리성」이란 제목하에 제6장 "정치가의 커리어 포인트"와 제7장 "정치적 합리성 가설의 검토"로 구성되어 있다. 정치가의 커리어 포인트는 대부분의 직종에 제도화되어 있는 '경력 경로(career path)' 개념을 고바야시가 정치가라는 직종에 수량화하여 적용한 것으로, 정치가들이 최종 목적지로 하는 내각총리대신 즉 수상직과 요직간의 거리이다. 검증 대상은 수상을 포함하는 내각 13개 대신과 9개 장관으로 구성되는 내각관련 요직과 幹事長,總務회장, 政調회장 등 당 3역과 각 정조부회장과 국회대책 위원장, 세제조사회회장 등으로 구성되는 자민당내 요직이다. 고바야시는 이들 요직과 수상직과의 거리계산에 2가지 방법을 쓰고 있다. 첫째는 정치가 개인별 공직경력 데이터를 이용하여 당해 내각에서 역직에 취임한 정치가 전원을 대상으로 그들이 그 이전에 어떤 직책을 경험하였나 비교하여 변동상황을 집계해 정방행렬을 작성, 偏微分을 이용하여 역직간 거리계산을 하는 방법이다. 둘째는 鳩山내각부터 宮澤내각까지를 5기(鳩山-池

田, 佐藤, 田中-鈴木, 中曾根, 竹下-宮澤)로 나누어 당해 내각 정치가 전원이 차기 내각에서 어떤 요직에 취임하는가를 비교하여 커리어 포인트를 산정해 내고 있다. 전자는 특정 요직을 얻기 이전까지 경험한 여러 가지 요직의 경로를, 후자는 특정 요직 취득 이후어떤 요직을 향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고바야시는 커리어 포인트의 변화를 내각별과 파벌별로 분석하고 있다. 鳩山내각부터 池田내각까지의 1기에는 통상대신 및 당3역 그룹, 외무대신과 대장대신이 수상이 되기 위한 중요한 6개 핵심 자리였다. 이들 6개 역직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통상대신의 경우는 내각관방장관, 농림수산대신, 우정대신, 건설대신이 중요한 자리이며, 외무대신이나 대장 대신의 경우는 운수대신이나 후생대신으로부터 요직 경로가 형성되어 있었다. 佐藤내각 시에는 수상이 되기 위해서 대장대신직이 중요해졌고, 6개 핵심 요직 주변직으로는 운수 대신과 후생대신의 중요성이 증가하였다. 中曾根내각 시기에는 수상에 가장 가까운 6개 핵심직에서 대장대신의 거리가 멀어졌으며, 6개 핵심직 가까이는 내각관방장관이 제일선 에, 이어 농림수산대신, 우정대신, 건설대신, 후생대신, 방위청장관 등 5개 요직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竹下-宮澤시기에는 대장대신이 수상직에 가장 가깝게 다시 부상하였고 이어 간사장과 총무회장, 외무대신이 중요하며, 통상대신과 정조회장의 거리는 상대적으 로 멀어졌다. 파벌별로는 초기에는 주류파에 커리어 포인트가 높은 요직이, 反주류파에 커리어 포인트가 낮은 요직이 할당됨이 명확히 나타남을 분석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田中내각 후반 이래 파벌균형 인사책으로 인하여 그 이전과 같은 주류파가 중요한 자리 를 대부분 차지하는 경향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수상을 배출한 주류파는 커리어 포인트 에 있어 1위를 차지하는 추세가 계속되었음을 입증하고 있다.

제7장에서는 제3부의 문제인 정치가의 합리성을 가설 3가지를 통하여 검증하고 있다. 가설 1은 '地元(지역구)이익 공여 가설'로 정치가는 자신의 선거구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행동하여, 지방자치체에의 보조금 배분에 관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가설 2는 '지지자이익 배분 가설'로 정치가는 자신의 지지자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행 동하여. 지방자치체의 재정지출에 관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가설 3은 '정치가이 익 享受 가설'로 지방자치체의 재정에 관한 정치가의 영향력은 정치가의 득표나 정치자 금이란 이익으로 환원된다는 것이다. 고바야시는 이 3가지 가설을 모두 지지하고 있다. 地元이익 공여 가설 검증을 위하여 지방자치체의 1인당 보조금 결정과 해당 지방자치체 의 재정상황(1인당 수입부족), 경제환경(제1차산업인구비, 제2차산업인구비, 인구증가율, 취업자비, 인구집중지구), 생활환경(하수도보급율, 자가주택 보급율, 도로정비율, 도로포장 율), 정치환경(각 당의원의 당선횟수 및 커리어 포인트)의 관련을 분석하고 있다. 그 결 과 수입부족이 지방자치체 보조금 결정에 가장 지대한 요인이지만, 선출된 국회의원중 자민당의원의 커리어 포인트는 교통교부세를 제외한 보조금 총액을 결정하는데 2번째로 중요하며, 국고지출금을 결정하는데 4번째로 중요한 변수임을 발견하고 있다. 보조금에 관하여 자민당의원의 당선횟수는 물론 유력한 요직을 어느 정도 거쳤냐하는 커리어 포 인트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반면에 야당의원들은 보조금 배분에 영향력이 없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지자이익 배분 가설의 검증을 위해서는 농민, 상공업자, 노동자와 같은 특정 지지층

을 위한 세출 항목과 각 지방자치체의 중의원 선거시 정당별 득표율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그 결과 농수비, 상공비, 소방비, 재해비는 자민당과, 민생비는 사회당 및 공산당과 正의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고 있다. 또한 정치환경을 재정상황, 경제환경, 생활환경과 중회귀분석을 해보면 특히 농수비와 민생비가 정치환경과 강력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정치가이익 享受 가설 검증을 위하여는 1976년도 이래 전년도 보조금으로부터 당해년도 중의원 선거 득표율, 선거후 커리어 포인트와 차년도 보조금에 이르는 경로분석을 하고 있다. 정치적 영향을 받는 세출로는 지방자치체의 투자적 경비가 대표적이다. 투자적 경비와 해당 자치체의 선출 국회의원의 省廳別 커리어 포인트의 관련을 보면, 투자적 상공비는 통산성 관련의 커리어 포인트에 플러스 효과를 부여하고 있다. 즉, 강력한 통산족이 있는 지역에서는 지역의 상공관계자를 위해 다른 지역보다 세출이 많다. 통산족 의원은 과잉한 세출의 대상이 된 상공관계자로부터 착실히 표를 회수하여 통산족으로서 경력을 더 쌓게 되는 것이다.

고바야시는 재정상황이나 경제환경 등에 기초한 객관적 방식이 아닌 정치적 환경이 보조금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다. 고바야시는 선거에 서 싸워야 하는 것은 정책이지 이익유도는 아니며, 공공사업 수주선이 정치가에 투표하 는 것으로 결정되는 이익유도 선거는 정치가의 압력에 의해 행정이 움직이는 일종의 행 정에 대한 '선거간섭'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제4부 「유권자의 반응」은 제8장 선거의 거시분석과 제9장 투표행동의 미시분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거의 거시분석으로는 득표율의 변화와 정당지지율의 변화를 지역특성 과 경제상황의 변화로 설명하는 틀을 쓰고 있다. 사회당의 득표율이 장기적으로 계속 하 락하여 온 것에 비하여 자민당의 득표율은 장기적 하락 추세에서 70년대 후반부터 80년 대를 거쳐 상승하는 이른바 '보수회귀'의 현상을 보였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고바야시 는 중의원 선거구와 전국 3,200여개 市町村의 지역적 특성 변화에서 자민당과 사회당 양 당의 장기적 하락 추세를 설명하고 있다. '도시-농촌'의 축과 '활성-정체'의 축으로 지역 의 사회경제적 요인들(인구신장율, 취업자수, 노년인구비, 인구집중지구, 세대인구, 제1차 산업인구비, 제3차산업인구비, 제2차산업인구 신장율)을 분석하여 보면, 일본의 지역적 특성은 '농촌-활성' 축에서 1972년 제1차 석유파동을 기점으로 '도시-정체'의 축으로 이 전하고 있음을 보인다. 즉, 70년대에 들어와 도시화 속도가 둔화되고 석유파동 이래 고 도성장 활력도 정체되는 특성을 보이게 된다. 고바야시는 사회당의 경우 초기에는 도시 에서 지지기반을 유지하였으나 신흥정당들에게 도시부 유권자를 빼앗기면서 농촌형 정 당으로 이전하는 추세를 보인다고 분석한다. 자민당의 장기저락 역시 농촌부 선거구의 定數가 도시부보다 상대적으로 과대한 定數 불균형에 의지한 채 도시형 정당으로 적응 하지 않은 데 있다고 해석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특성적 설명으로는 70년대 후반 이래 자민당 부활을 설명하지 못하므로 이 시점부터는 경제상황적 설명을 도입하고 있다. 고바야시는 1955년 체제를 제1기(1975년 이전), 제2기(1976-1988), 제3기(1989년 이래)로 나누어 각 당의 득표율 및 지지율과 내각 지지율을 경제상황 변수인 GNP 및 고용지수와 교차시켜 보고 있다. 그 결

과 제1기에는 경제성장 변수들이 자민당 지지율을 상승시키지 못하고 있음에 비하여, 제 2기에는 경제상황이 호전될수록 자민당 지지자가 증가하며 반대로 악화하면 감소하는 관련이 있음을, 그러나 제3기에는 거품경제에 의한 호경기가 계속되면서 경제상황과 자민당 지지율과의 관련이 사라지고 있음을 발견하고 있다. 고바야시는 제2기의 보수회귀를 석유파동 이후 일본경제가 회복되면서 상대적인 생활만족 의식을 얻은 유권자들이다시 자민당 지지로 돌아선 것이라고 추론하고 있는데, 제3기에는 왜 이러한 요인이 계속 작동하지 않는지 뚜렷한 해석을 하지 않고 있다. 이어 고바야시는 주관적 경제변수로 1972년 이후 서베이 데이터를 이용하여 생활만족감과 생활향상감이 자민당 지지와 내각지지에 반영됨을 입증하고 있는데 이의 소개는 생략하기로 한다.

제9장 "유권자의 반응: 미시분석"은 여타 투표행동 연구들이 분석하는 사회적 속성, 정당지지, 쟁점태도, 정치불신·생활만족도, 자기 주변 세계 5가지 모델에 대한 간략한 분석과 이들의 투표행동 결정계수 분석을 하고 있다. 이들을 비교해 보면 정당지지모델이 가장 강력한 편이며, 그 다음으로는 사회적 속성 모델이 설명력이 큰 편이나 모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설명력이 하락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쟁점태도 모델의 설명력은 1972년 중의원 선거부터 저하하여 1993년 선거에서는 훨씬 낮아진다. 정치불신·생활만족 모델은 1986년부터 1990년 선거에서 정당지지 변수 다음으로 높은 결정계수를 보였다. 자기 주변 세계 모델은 다른 모델에 비하여 설명력이 낮은 것으로 드러난다.

마지막 장인 제10장은 "민주주의 재생을 위한 방책"이란 제목으로 유권자가 바라는 정치를 직접적으로 국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정치제도를 모색하는 부분이다. 고바야시는 공약이나 정책이 선거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기 위하여는 현재 애매하게 제시되고 있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책을 분명히 하여 유권자가 바르게 알고 선택할 기회를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하여 '선거공약 등록제'를 채택할 것을 주장하는데, 이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제시하는 정책을 예산안화하여 등록하며, 선거 이후 제시되었던 예산 안의 변경이 있을시 유권자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는 것이다.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1994 년 채택된 '소선거구-비례대표 병립제' 대신 '定數자동결정식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주장 하고 있다. 이 제도는 都道府縣을 중심으로 선거구를 정하고 각 정당은 매 선거구에 순 위를 정하지 않은 명부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유권자는 이 명부에서 후보자를 선택 개인 명을 써서 투표하는 것이다. 갓 정당의 투표를 선거구가 아닌 전국 단위로 집계하여 동 트식으로 의석을 배분하고, 각 당에 배분된 의석을 각 당의 각 선거구의 득표율에 따라 最大剩餘식에 의해 각 선거구에 다시 배분한다. 그 다음 각 당의 각 선거구에 배분된 의 석은 그 당 후보자의 득표 순위에 따라 배정된다. 이 방법은 통상 인구비례로 정하여지 는 의원 定數가 투표율의 차이로 인해 1인 표의 격차를 야기하므로, 표의 등가성 원칙에 보다 근접하기 위해 득표수에 따라 의원 定數를 자동 결정하자는 취지이다. 고바야시는 이 제도를 채택하면 定數불균형 문제가 없어질 뿐만아니라 투표율이 자신이 속한 선거 구의 의석수에 반영되기 때문에 투표에 참여하고자 하는 인센티브를 유권자가 갖게 되 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직접민주제 방식에 의해 대의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국 민투표 및 주민투표의 실시와 定數자동결정식 비례대표제가 실시되지 못할 경우 미국식 예비선거를 수정한 '통일예비선거'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 책의 평가는 고바야시가 계획했던대로 기존의 일본 정치과정 분석과 달리 포괄적 분석이 되었는가에 있다. 유권자-국회의원-정부 정책으로 이어지는 분석은 다른 정치과 정 연구보다 분명히 포괄적이라는 데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이다. 문제는 선거시 후보자들의 공약과 보조금 배분과 같은 지표가 정치과정의 연결고리를 살피기에 충분한가에 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합리성'과 '민주성'의 구분이다. 고바야시에게 있어선거시 공약의 기능不全은 反민주적이지만 동시에 정치가들의 이익 공여나 이익 享受는합리적인 행위로 비쳐진다. 그가 합리성에 투철하자면 현재 일본의 정치과정이 민주적이든 反민주적이든 왜 기능적으로 작동하는지에 초점이 있어야 할 것이며, 민주성이란 가치판단에 일관되자면 합리성 모델은 굳이 필요하지 않다. 그는 주로 민주성 판단에 서고있지만 가끔 합리성 모델로 건너가 혼란을 초래한다. 이상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일본정치에 대한 포괄적인 계량분석으로 이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일본정치를 전공하는 연구자에게는 일독을 권한다.